

'예보료 인하' 박재식의 취임 일성, 공염불 되나

(저축은행중앙회장)

차등평가제 형평성 논란에도... 예보 "보험료 인하 불가"

은행 업권별 보험료율 0.08%
저축은행은 0.40%로 5배 높아
재무건전성 개선에도 증가세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차등보험료 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됐는데도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금보험료 폭탄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 대상이 저신용자 등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제2금융권이어서 예보와 업계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차등보험료제도는 예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회사의 경영·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 및 평가 등급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위기대응능력 등 5개 분야를 평가해 1~3등급으로 구분하고 1등급인 금융회사는 보험료율에 5%를 할인, 3등급인 경우에는 5%를 할증하는 방식이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지난 1월 취임때 저축은행의 예보료가 너무 높다며 이를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업권별 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증권 0.15%다. 반면 저축은행은 0.40%로

은행에 비해 최대 5배 이상 높았다. 보험료율이 가장 높았던 2000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은행, 금융투자, 보험·증권은 각각 0.10%, 0.20%, 0.30%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저축은행은 그 이후 (0.30%)에도 0.35%, 0.40%으로 계속 증가했다.

◆ 저축은행 보험료율 지속 증가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음에도 저축은행의 보험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차등평가 등급도 재무건전성 개선과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확대·축소됐다. 2017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를 보면 회사는 269개사로 같지만 1등급은 2016년

(2016~2017년 차등평가 결과)

/자료=예금보험공사

등급	2016년		2017년	
	전체	저축은행	전체	저축은행
1등급	109개사	70개사	61개사	25개사
	40.50%	90.90%	22.70%	32.10%
2등급	128개사	6개사	177개사	42개사
	47.60%	7.80%	65.80%	53.80%
3등급	32개사	1개사	31개사	11개사
	11.90%	1.30%	11.50%	14.10%
전체	269개사	77개사	269개사	78개사
	100%	100%	100%	100%

109개사에서 2017년 61개사로 48개사 축소됐다. 저축은행도 2016년 1등급이 70개에서 2017년 25개로 떨어지면서 45개사의 등급이 일제히 하락했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기존에는 3등급만 전체에서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했는데, 2017년부터는 1·3등급이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변경됐다"며 "1등급이 많아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반영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지난해 저축은행 1·2위인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도 등급 하락으로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 받고, 저축은행 사태 때부터 경영개선으로 살아남은 DB저축은행도 등급하락을 맞아 높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14%가 넘어 금융당국의 기준을 넘어설 정도로 개선됐는데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보료만 오르고 있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예보료도 지난 2013년 5641억원에서 2017년 1조148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은행이 지난 4년동안 1조 6151억원에서 27%(1조9164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보험사의 증가세가 가파른 셈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은 저축은행 사태 때처럼 예보료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데, 예보료는 계속 오르고 있다"며 "건전성을 개선하더라도 평가등급 비율에 따라 3등급을 받으면 예보료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예보 "공적자금 회수돼야 예보료 인하 검토"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금융회사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새 지표를 개발해 차등보험료제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위성백 예보 사장은 "2019년에는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를 더 많이 찾아내 보험료율을 다르게 매길 것"이라며 "등급도 3등급에서 5~7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새 지표가 마련되더라도 2금융권의 예보료 인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저축은행권에서 예금보험료 등이 27조원 이상 빠져나가 예보료 계정 손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율을 낮추면 2026년까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려는 당초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예보료 인하는 어려울 전망이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개선되고 부담이 크다는 것은 알지만 특정 업권만 예보료를 인하해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우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왼쪽 두번째)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올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조... 8.2% 인상

유효기간 1년... 조만간 내년분 협상 4월 대통령 재가 등 거쳐 정식 발효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다.

유효기간은 올해 1년으로, 조만간 내년 이후에 적용할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보다 900억여원 적은 1조389억원으로 타결됐다.

이 액수는 지난해 분담액(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을 (8.2%)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

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우리 측이 분담하게 하려고 제기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는 철회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 취지와 목적이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에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납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됐다.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추가 현금 지원'을 철폐하고 설계·감리비 현금지원 비율(군사건설 배정액의 12%)을 집행 실적에 따라 축소할 수 있도록 해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했다.

또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이월을 제한하고 군사건설과 군수분야 사업 선정 및 집행시 우리측 권한을 강화했다.

한미는 아울러 상시협약체인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구성해 현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규정을 본분에 삽입하고 인건비 지원 비율 상향선(75%)을 철폐해 우리 정부의 인건비 부담을 확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과 함께 주한미군 규모에 있어 어떤 변화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업집단법제 개편, 옥죄기 아닌 성장엔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감독기구 정당성으로 신뢰 쌓아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집단법제와 관련해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기업이 성장엔진으로 거듭나는 데 유익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10일 국가미래연구원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경제·금융협력연구원 회의(GFIN) 조찬세미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 설명에 앞서 시장 감독기구와 시장참여자 사이의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말만 해도 금융회사들이 잘 따라오지만 공정위는 어떠한 결정을 하면 (기업은)복복하고 법원으로 간다"며 "무엇이 차이이고 문제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영국이나 미국의 시장감독기구는 사전 경고 등 메시지를 보낼 때 해당 기업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가 매우 촘촘히 짜여 있다"며 "우리도 시장감독기구가 신뢰를 쌓기 위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는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행정기구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을 타파하고, 당사자 간 사전해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직원이 600명인 공정위가 매년 민원 5만여건, 신고사건 4000여건을 처리하는 역부족인데도 처리가

지연되면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을 얻는다"며 "공정거래법 개편안 중 법집행 체계 개편을 통해 분쟁조정기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로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들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 법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다른 법제와 함께 체계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집단법제 개편은 '이게 재벌 개혁법이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업 옥죄기가 아닌 기업이 성장엔진으로 거듭나는 데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미래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수·합병(M&A)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규율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침소봉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불합리사항 개선 방안 실무 검토중"

>> 1면 '보험설계사 수수료...'서 계속

생명보험협회는 이미 계약 첫해에 지급되는 수수료 비중을 현행 최대 90%에서 55%까지 낮추는 안에 대해 회원사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수당, 수수료와 보험상품 사업비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

며 "구체적인 개편방안과 발표(시행)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수료 및 보수체계에 대한 규제 강화가 금융산업의 성장과 사회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수수료 체계, 중개인에 대한 보수체계 규제 강화는 불안전판매 억제 등 소

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만 오히려 정보전달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연구위원은 "수수료 규제가 금융 소비자, 중개인, 금융회사의 행위를 변화시켜 소비자의 금융상품 수요를 줄일 수도 있고 합리적이지 못한 금융상품 선택을 불러오는 경우도 있다"며 과도한 수수료 규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김희주 기자 hj99@